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<목 차>

1.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양재 훈
	담당부서 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최준우		연락처	02-2100-2993
	과장	김기한		이 메 일	83yjh@korea.kr

정 책 책 임 자 직 위

성 명 (서 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		
	2.규제조문	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제4호		
	3.위임법령	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8.5.17 ~ 6.26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은행업권의 대출증가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대율 상승으로 향후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		
	7.규제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(예대율)를 추가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input type="checkbox"/> (피규제집단) 상호저축은행(79개사) <input type="checkbox"/> (이해관계자) 금융 소비자 등		
	9.규제목표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,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	(자동입력)
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은행의 대출확대가 예수금 범위내에서 제한됨에 따라 저축 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으나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위험 감소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		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		
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6(경영건전성의 기준)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⑦ (생 략)	제11조의6(경영건전성의 기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</u>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추진 배경) 저축은행업권은 '15년 이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에 따라 큰 폭의 대출 증가세 시현

* 대출금(조원) : ('10말) 64.6 → ('13말) 29.1 → ('15말) 35.6 → ('17말) 51.2

* 가계대출 증가율('16-'17) 14.1%,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('16-'17) 35.5%

- 이로인해 예대율*도 지속 상승하여 '17년 업계 평균 100.1%에 도달

* 예대율 = 대출금(총여신) ÷ 예수금(총수신)

* 평균 예대율 : ('12말) 75.2% → ('15말) 94.5% → ('17말) 100.1%

- 한편,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,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

지표	예대율 상위 10개사	여타 저축은행
총여신 증가율('16-'17)	23.5%	16.9%
고위험대출(금리 20%이상) 비중('17)	28.8%	12.5%
고정이하 여신 비율('17)	7.0%	4.8%

- (정부개입 필요성) 과도한 대출확대에 따른 향후 부실화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도입

[참고 - 예대율 규제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]

- (예대율 규제의 의의) 저축성 수신 범위에서 대출을 실시토록 하여, 금융기관의 급격한 외형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훼손 및 유동성 악화* 방지

* 예금대비 과도한 대출은 자산(대출 등)-부채(예금 등)간 만기구조 차이(자산>부채)로 인한 상환위험을 높이고, 만기연장 위험 및 조달비용이 높은 시장성 수신(금융채 등)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경향

- (도입 필요성) 건전성 악화 방지 및 대출증가 억제가 긴요하며, 업권간 형평성 및 규제도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도 고려할 필요

- (건전성 악화 방지) 高예대율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 고려시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방

- (대출증가 관리) 가계대출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등 대출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제한

- (업권간 형평성) “동일기능-동일규제” 원칙에 따라 수신기관인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

- (적시성) 예대율 상승 추세 고려시 규제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로 제도 도입 곤란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(대안의 내용)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대출확대 자제를 유도하거나, 타 수신 업권(은행, 상호금융)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대출 규제를 도입
- ☐ (선택 근거) 대출확대 억제 효과성, 타 수신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에도 예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
 -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타업권의 규제 수준*,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출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할 예정**

* 예대출 규제 비율 : (은행) 100%(12.7~), (상호금융) 80~100% 차등 적용(14.1~)

** '19년 1년 유예 후 '20년 110%, '21년 100%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상호저축은행	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	입법예고 진행 이전

3. 규제목표

- ☐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,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☐ (규제목적)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☐ (규제수단) 과도한 대출로 저축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, 공적자금 투입 등 사후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, 예대출 등 사전 규제가 합리적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	국제기준	일몰설정	원칙허용·
기술	경쟁	중기	규제설계	정합성	여부	예외금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☐ 해당사항 없음

○ 타법사례

☐ 은행법 제34조, 은행법 시행령 제20조,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

☐ 신탁법 제83조의3, 신탁법 시행령 제20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☐ '17말 업계 평균 예대율이 100.1%로 규제 목표(100%) 수준이며, 단계적 시행* 예정으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 준수 가능성 높음

* ('20.1.1 ~ 12.31) 110% 이하, ('21.1.1 ~) 100% 이하 (감독규정에서 정함)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☐ 금번 규제안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심사 인력 소요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☐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☐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 증가 관리 및 건전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예대출 규제 도입방안 마련('18.4월)

☐ '18년내 저축은행업 시행령·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도입 추진 중

2. 향후 평가계획

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☐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